

지방자치·종합

한미FTA 이것만은 꼭 보완해야



최인기 농수산위원장

-한미 FTA 비준안을 바라보는 농어민의 시름이 깊다.
-한미 FTA는 기본적으로 자동

“발농업·수산업도 직불제 적용해 줘야”

차, 섬유 등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과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 농어민과 중소기업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려면 피해 예상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농수산 분야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데.
-정부가 2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 농어업 분야 피해 보전 대책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 대치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한미 FTA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등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며 내년 1월1일 발효를 위해 이달 내에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제거, 양국 간의 이익 균

을 세운다고 하나 이는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실제로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매년 2.5조원의 FTA 대책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으나 내년 FTA 예산은 1조8594억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불요불급한 예산(5835억 원)을 포함하면 실질 지원은 1조2천억원대에 그치고 있다.

-국회 농수산식품위에서 피해보전 대책으로 1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진전은 있는지.

▲일부 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긍정 검토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전 단계로는 대중 넘어가려는 모습이다.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농어민의 피눈물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13가지 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소득보전 직불제 개선 방안(발동 기준 및 발동 기간 연장)이 받아들여져야 실질적 피해 지원이 이뤄진다. 여기에 발농업 및 수산업

직불제 도입과 함께 농사용 전기세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사료 원료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면제와 축산 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FTA 이행 기금(10조원) 조성 등도 절실하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외면한다면 ▲농어민과 함께 한미 FTA 비준을 몸모으는 한편 실질적인 피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 /임동욱기자 tuim@



김동철 외통위 간사

-한미FTA의 근본적 문제점은.
-재협상은 없다던 이명박 정부가 파주기시 양보 끝에 내놓은 것이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지금의 누더기 FTA다. 손해 보는 FTA일뿐 아니라 일부 대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해 농업과 중소기업의 생계를 버랑으로 내모는 ‘부자 FTA’며, 우리 헌법 위에 군림하는 ‘주권침해 FTA’다. 더구나 피해대책조차 없는 ‘준비 안 된 FTA’다.

-민주당의 입장은.
-▲이 같은 손해를 바로잡기 위해 민주당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요구했으며 중

소상인보호장치와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 등이 한미 FTA로 무효화되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역시 불가조항과 같이 우리나라의 이익 또는 주권을 심각히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은 철폐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10+2 재재협상’을 제기했다.

그 중에서 특히 기존 국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대책 효과 유

지와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 문제, 투자자국가소송제 보완 등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본다.

-정부·여당이 마련한 피해 대책은.
-▲민주당의 ‘10+2안’에 대해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국민과 함께 야당이 제시한 재협상 항목 하나하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까지 말했는데도 충분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남경필 외통위 위원장은 “강행처리 않았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럼에도 여야정협의 체에서 이렇다할 성과도 없는데도 이달 안에 상임위를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그동안 국민을 기만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다. 만일 한나라당이 강행처리 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 강력하게 저지할 수밖에 없다.

-여당의 한미FTA 처리에 대응하는 향후 대책은.
-▲정부가 한미FTA 번역문 오류 정교표본과, 이행법안의 이해득실 분석내용과 같은 아주 기초적인 자료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충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한미FTA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재균 지경위원

- 한미FTA 체결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피해는
-한미FTA가 시행되면 중소기업

“마트·SSM 등록제, 허가제로 바꿔야”

공인의 보호장치인 ‘유통법’과 ‘상생법’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최대 18만 중소기업인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2만5000명이 실직하고 11조원의 매출 피해가 예상된다. 또 중소기업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피해분석도 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청에 요구,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오는 12월23일 나오는 결과를

바야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한미FTA가 시행되더라도 두 법안이 무력화되지 않고 중소기업인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정부가 취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마트와 SSM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위원이 발의한 ‘유통법’과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또 서비스자

유무역협정(WTO, FTA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보상하는 내용의 ‘피해구제법’도 입법 완료돼야 한다.

-한나라당과 정부의 입장은.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금을 신설하는 수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 모두 앞의 대안에 부정적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마련하는 대책으로는 피해를 막기에 역부족이다.

-여당의 한미FTA 처리에 대응하는 향후 대책은.

▲정부가 한미FTA 번역문 오류 정교표본과, 이행법안의 이해득실 분석내용과 같은 아주 기초적인 자료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충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한미FTA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마리나·수상비행장·양식업 조성 전남도 ‘살맛나는 어촌’ 11조 투입

전남도가 10조원대 예산을 투입, 살맛나는 어촌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전남도는 18일 2015년까지 11조 4000억원을 투입, ‘제2차 해양수산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11조4170억원(국비 4조8640억, 도비 7419억, 시·군비 1조279억, 용자 932억, 민자 4조6900억)를 들여 7개 추진전략 220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우선, 살기좋은 어촌과 도서 건설을 위해 어촌정주어촌개선사업과 어촌복지 인프라 확충에 7450억원을 들여 선착장과 방파제, 해안도로, 물양장, 다기능 부잔교 등을 확충하고, 섬을 몸모으는 한편 실질적인 피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 /임동욱기자 tuim@

단지와 국제휴양타운 등을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 마리나시설 확충과 해양레저 장비산업, 도서 교통난 해소, 수상비행장 건설 등에 4059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355억원을 들여 어촌체험마을이나 갯길 탐방로 해양관광 소프트웨어도 구축한다.

항만물류산업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해양항을 다목적 국제항만으로 전환하고, 배후 부지에 화물창출 기반 시설 등을 위해 2조1832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물동량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추진한다.

목포신항 내 물류특화단지 조성, 배후단지 개발, 교통망 확충 등을 위해 3738억 원이 투자되며, 완도 무역항 개발 등 13개 사업에도 8335억원이 투입된다. 이와함께 전북, 해상, 김을 비롯한 수산물의 양식업 조성 등에도 15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간사인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왼쪽)이 민주당 의원 김성동 의원(오른쪽)과 18일 오전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실에서 한미FTA 비준안 논의와 관련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0월 꼭 처리” “先대책 우선”

외통위, 한미FTA 비준안 처리 재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가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회의장 점거로 파행했다. 여야는 오는 20, 21일 양일간 외통위 차원의 ‘갈장 토론’을 다시 열기로 했으나 한미 FTA 처리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은 10월 처리를 고집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선(先)대책 없는 통과 없다’는 원칙을 고수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서울시 당협위원장회의에서 “우리는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이번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10월경에는 꼭 처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반해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독소조항을 제거해 양국 간 이익 균형을 바로잡고 농수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기 전에는 (비준안) 통과가 없다는 입장이 확고부동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불면증 한방(韓方)으로 치료!' (Insomnia treated with Korean medicine). Includes text about symptoms, treatment method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경희한의원' (Gyeonghee Han의원). Features images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ngredients and packaging.